국제정세 격랑 속 셔틀외교 순항…머리 맞댄 한일 정상

에너지 공급망 불안속 협력 강화 공감
李대통령 “한중일 공통이익 모색” 강조
다카이치 “인도·태평양 안정 중추 역할”
美리더십 약화·북중러 밀착 고민 지속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 정상이 19일 마주 앉아 공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정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약식 회담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만남이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일곱 차례 만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한 셈이다.

셔틀 외교의 순항은 특히 격변을 거듭하는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한 국제 무역 질서 및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 협상,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북·중·러 밀착과 맞물린 동북아 안보 환경 등에서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다.

양 정상이 이런 의제들에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면 각종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외교적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윈윈’할 수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국제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며 원유 및 석유 제품,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회담에서 주로 논의했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초국가 스캠범죄 등 치안 분야 등 민생·경제 부문 협력을 심화하는 데 더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화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한 셈이다.

다만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셔틀 외교 항로에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언제 들이칠지 모를 거센 폭풍우가 이는 형국이다.

지난 14일 끝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을 얻어내는 데 집중,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견제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을 노출했다.

미국의 리더십이 중심이 된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역내 경제·안보적 안정을 꾀해 온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는 등 북중러 밀착이 지속되면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일 정상이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국의 공통 이익 모색 필요성,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간 안보·경제 분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언급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참전기념탑 건립 용역 보고회 광주시는 19일 서구 치평동 광주보훈회관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자회 등 광주지역 보훈단체 관계자와 회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기념탑 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상무시민공원 내에 기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 제공〉

양부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9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청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 건수는 2022년 306건에서 2024년 541건으로 약 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55건에서 17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한 경우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소속 기관장이 상담·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정진욱 “정용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극우성향 기업 5·18 폄훼 이벤트 경악”
“신세계 오너 지키기 물타기 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9일 성명을 내 “역사적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극우 성향의 기업이 벌인 5·18 폄훼 막장 이벤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5·18 민주영령과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비웃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벤트에 쓰인 ‘책상에 탁!’은 또 무슨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기업의 마케팅에 소비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한국 스타벅스가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타벅스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인들의 총칼에 희생된 광주시민들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5·18민주화운동을 가해자 입장에서 마케팅 소재로 썼다는 점에서 스타벅스가 극우와 일베에게 완전히 장악돼 있지는 않은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5·18을 폄훼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이런 극악한 마케팅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팀장이 승인하고 마케팅 담당 임원이 결재한 과정의 꼭대기에는 한국 스타벅스의 오너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정 회장은 극우적 행태로 일베들의 우상이 된 지 오래이고, 그룹 오너가 멀쩡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스타벅스 대표 경질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 스타벅스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 이마트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직접 5·18 유족 및 5월 단체는 물론 국민 앞에 나서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용진 회장이 격노했다는 식의 오너지키기 물타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회장이 뒤로 숨는다면 신세계그룹, 이마트, 스타벅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수기자

“오월 정신, 12·3 불법 비상계엄 막아”

우원식 의장, 전남대 용봉포럼 강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광주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12·3비상계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트기 전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출근길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회 담장을 넘었다”며 “상대가 법 기술을 부려 무효로 만들지 못하도록 절차적 흠결을 없애는 데 집중했고,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과 과거 사례를 찾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단 10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즉각 국회로 모여 장갑차를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5·18 이후 17년 동안 싸워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내며 체득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는 확신이었다”며 “5·18 민주화 항쟁의 승리가 12·3내란을 막아낸 것이며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우리 DNA에 깊숙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김진수기자